



학생 선발의 지역할당제

박 종 열 | 경북대 교육학과 교수

I. 문제 제기

서울대 신입 총장의 지역할당입학제 추진 노력이 갑자기 탄력을 받고 있다. 2002년 7월 정운찬 총장의 생각이 처음 알려졌을 때만 해도 찬반 양론이 엇갈리는 분위기였다. 이 때의 생각은 인구 비례에 의한 지역할당제라는 발상이었기 때문에 회의적인 감이 있었다. 그러나 2002년 8월 13일 이후 개별 1~2명 할당으로 선발 범위가 축소되고, 2004~2007년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발표된 후 이상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유인종 서울시 교육감의 지지를 통하여 그 실현 가능성이 점점 높아 가고 있다.

서울대가 지역할당제¹⁾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소득이 낮은 계층이나 교육 환경이 나쁠수록 우수한 대학의 진학 기회가 줄어드는 사회 현상의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²⁾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여건은 나쁘

지만 잠재능력이 우수한 학생이나 도시의 어려운 학생들과 같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 더 많은 배려를 할 것과 어려움의 원인을 치유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지역할당제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지역할당제가 시골 학생들에게도 평등한 대학 기회를 주어 꿈과 용기를 주고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하고, 서울대의 귀족주의에 제동을 걸며, 인구 분산에도 기여하고, 시골 학생들에게 서울대의 값싸고 고품질의 교육을 맛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³⁾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대만 지역할당제를 실시할 경우 서울대 중심주의 혹은 우월주의 및 서울 중심주의라는 비난⁴⁾을 감수하여야 한다. 서울 지역의 대학에만 지역할당제를 적용할 경우 지방 대학을 살리기 위하여 지역대학공동체론⁵⁾을 주장하는 일부론자들에게는 부정적 시각으로 보일 것이다. 아울러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보다는 일류대를 향한 획일적인

1) "추천제 확대 대안제기" 한국교육신문, 2002.9.2. p.7에서는 지역할당제에 대한 한국교육신문에서 실시한 인터넷 투표에서 67%가 찬성, 29%가 반대, 잘 모르겠다가 4%를 나타내고 있고, 리서치 앤드 리서치사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에서는 찬성 52.8%, 반대 26.6%를 나타냈다.

2) 유영제, "대입전형의 형평성", 조선일보, 2002.8.26 A6.

3) 한국교육신문, 상계문

4) 전상인, "지역할당제보다 중요한 것" 시론, 동아일보, 2002.8.25.

5) 두재균, "지역할당제, 지방대 더욱 위축시킨다", 동아일보, 2002.9.3 A7에서는 지역공동체란 지역과 대학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상호 순환하는 개념으로 지역이 해당 대학에 우수 인재를 보내고, 대학은 사회에 적합한 인재교육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교육이 우려되고, 학력과 간판봉조를 조장하며, 능력 있는 학생의 입학이 제한 당한다⁶⁾는 이유를 들어 지역할당제를 반대한다.

한국의 고등교육은 그 동안 장족의 발전을 하여 취학률⁷⁾이 80.5% 정도가 될 정도로 일반화되었다. 이와 같이 고등교육의 기회가 일반화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정책에 따른 입시제도의 개혁이 주도하였으며, 고등학교의 취학률이 의무교육과 같은 수준인 96% 이상이 되어 국민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누구나 원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고등교육의 기회에 접근이 가능하지만 아직도 문제로 남는 것은 학벌 사회의 표적이라 할 수 있는 소위 4년제 대학 혹은 일류 대학에 대한 진학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

과거의 입시에서는 한 줄 세우기와 같이 하나의 척도에 의하여 인간을 평가하는 단순 접근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였으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사회가 지식화, 정보화, 세계화, 다원화되면서 학생의 적성과 능력을 다면화된 평가 척도로 평가하는 다면적 접근법을 적용하여 능력의 단순성에서 복잡 다양성을 존중하게 되었다.

그 일환으로 현행 대학입시 정책을 보면 학교장 추천, 과목교사 추천, 동일계 고교 출신자, 국가유공자 자녀, 영농·임인 자녀, 영어 능력 우수자, 특수 재능 소유자와 같이 전형 유형이 다양하게 열려 있고, 특히 영농·임인 자녀 특별전형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추천이 필요한 것으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 지역할당제와 맥을 같이하는 영농·임인 자녀 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이 미미한 수준⁸⁾이고, 모집분야가 대체로 농업계열전공이라는 점이 문제이다. 그러나 군별 1~2명의 지역할당제는 그 모집분야나 사정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지만 지역인재할당제의 효시가 될 수 있으며 서울대가 이를 실천하는 것은 그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차체에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열된 교육 경쟁은 노동시장에서의 학력서열화가 지나치게 강화됨에 따라서 대학의 교육적 기능이 약화되고 대학교육시장이 노동시장의 지배를 받게 됨으로써 그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입시 문제는 노동시장에 관련이 있고 이는 노동시장에 관여하는 집단의 이해관계에 있으므로 노동시장과의 관련성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⁹⁾

II. 현행 학생선발제의 특징과 쟁점

2003학년도 대학입시제도도 여러 가지의 변화를 도모하게 되었다. 먼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언어·수리·사회탐구·과학탐구·외국어 영역으로 나누어 9단계 등급으로 제공하고, 학교생활기록부도 지·덕·체를 종합 기록할 수 있도록 하며, 학력과 관련된 자료, 즉 각종 자격증 경시대회, 경시대회 수상 경력, 수학 계획서, 자기 소개서, 추천서, 취업 경력, 면접 등 다양한 전형 자료의 활용하고, 아울러 학생의 개별적인 특성, 즉 특정 분야에 대한

6) 한국교육신문, 전계문

7)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00 교육통계편람』에 의하면 유치원 38.1%, 초등학교 98.5%, 중학교 99.1%, 고등학교 96.4%, 고등교육 80.5%의 취학율을 나타내고 있음.

8) 모 대학의 2003학년도 2학기 수시모집의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비율을 보면 주로 성적우수자라 할 수 있는 학교장 추천 65.2%, 영어 능력 우수자 10.0%, 특수 재능 소유자 9.5%, 과목교사 추천자 6.7%이고, 보상적 배려에 의한 동일계고교 출신자 5.2%, 국가유공자 자녀 2.2%, 영농·임인 자녀 1.3%로 나타나 있다.

9) 이두휴, 『교육경쟁의 정치경제학적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9(1), 1999, pp.150~176.

특기나 능력 우수자, 수상 실적, 실업계 고교, 산업체 근무 등 경력, 특수교육 대상자, 농·어촌 출신자, 생활보호 대상자 등 소외 계층 대상 전형 등 보상적 차원의 특별전형을 활성화하였다.

또, 대학의 독자적인 건학이념, 교육목표 등 각 대학이나 모집단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전형 기준과 전형 방법이 활성화된다. 대학에 따라서는 고교장 추천뿐만 아니라 학급 담임, 교과교사, 종교 지도자, 자치단체장, 산업체 추천, 자기 추천 등이 다양하게 실시된다.

그리고 주로 모든 요소를 일괄 합산하여 선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전형 자료별로 활용하는 방식, 다단계로 하는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 등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단계별 전형의 경우 각 단계별로 다양한 전형 자료를 자격 기준 또는 선발 방법으로 활용 가능하다.

새 대입제도에서는 대학이 학생을 연중 선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수시모집은 전형 일정을 분산하여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현상을 막고 여유 있는 전형 일정 확보를 통해 대입전형 다양화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조기모집·예약 입학·추가모집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연중 수시모집을 허용하더라도 3학년 1학기에 선발하는 경우에는 10%이내에서 특별한 학생을 예외적으로 선발하도록 하여 고등학교 운영에 있어서 혼란을 최소화하였다. 한편 정시모집은 4개군에서 3개군으로 축소되고 동일 군내에서 1개 대학만을 지원하는 현행 방식은 유지된다.

2003학년도 대입제도가 발표된 후 시간이 지나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문제점¹⁰⁾이 나타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교에서의 평가와 관련하여 이른바 성적

부풀리기에 대한 우려이다. 학생들의 학력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하면서 일부 학교의 시험문제가 쉬워짐으로 인하여 학력 저하를 가져오고, 그로 인해 정상적으로 평가하는 학교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불안 속에 공교육의 신뢰도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특별전형의 전형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경시대회 수상 경력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들의 대회 준비 혹은 참여 부담이 늘고 있다. 사회단체나 대학 등의 각종 경시대회가 난립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탐색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고, 학부모들의 과도한 욕심으로 많은 영역에서의 특기를 신장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셋째, 수능시험이 쉽게 출제되고, 9등급제의 도입으로 변별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즉, 2002학년도 대입전형에 적용되는 수능부터는 총점과 소수점 이하의 점수는 제공하지 않으며 대신 9등급과 영역별 성적만을 제공하므로 시험 변별력에 대한 문제가 파생할 것이다.

넷째, 특별전형의 확대로 학생들이 한 가지만 잘 하면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오해로 학력이 저하되고 있다. 특별전형으로 선발한 학생들 중 대학수학능력이 부족하여 대학에서의 정상적인 학업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별전형의 확대로 학생들의 특기 신장을 위해 낭비되는 교육적 노력이 증가한다.

다섯째, 고등학교에서의 추천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추천의 기준이나 내용을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서 추천에 따른 논란이 따르고, 추천 과정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추천의 공정성·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학생 평가상의 기술적 문제

10) 차건영, "대학입시 정책의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 한국교육정책의 회고와 전망. 『교육행정아카데미 제 17차 하계 세미나자료』. 경북대학교 교육행정 아카데미, 2002.8.16, pp.61~66

와 특별전형이 야기하는 사회적인 문제로 집약될 수 있다. 그러나 보상적 차원의 특별전형에 대하여 교육학적 혹은 정치·경제학적 문제 제기는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Ⅲ. 지역활당의 긍정적 논의

지역활당제¹¹⁾는 1998년에 경북대 박찬석 전 총장의 주창으로 지방 대학 총장들이 주축이 되어 국가 인재의 지역간 균등등용촉진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제안되었으나, 2001년에는 지방대학육성특별법 중 지역인재활당제로 입법화 과정을 거다가 국회에 계류상태에 있다. 지역활당제는 본래 지역의 인구 비례에 의한 주요 국가고시를 지방 대학에서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주창되었다가 지방 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그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등용하는 것으로 그 골격이 바뀌어졌다. 그러나 역차별과 같은 헌법 정신의 위배를 들어 반대가 심한 정책이어서 지체되고 있다.

미국은 소수 민족이나 여성 등 역사적으로 차별 받아 온 계층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평등고용 기회법(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 of 1972)을 제정하여 15인 이상이 근무하는 정부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정부 지원을 받는 교육기관 등에서 적극적인 평등 실현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사기업에서도 차별을 하지 않음을 입증할 책임을 지고 있다.

한국은 학력 사회이다. 학력 사회란 학력이 지위 결정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사회이다. 우리가 학력 사회를 문제시하는 것은 학력이 전문적 능력을 지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능력과 특

정 학교 출신을 중요시하는 상징적 학력, 즉 학벌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지역이나 성 및 사회계층은 학력 획득 기회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특히 과거 한국 사회는 중앙중심의 집중적 사회구조를 강화함으로써 정치·경제는 물론 교육적 기회 배분에서 도시와 비도시간의 격차와 함께 지역들간의 불균형적인 발전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비도시 지역민들이 대학 학력에 접근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으로 이동하여야 하는데,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 불평등은 점점 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여야 한다. 도시와 농촌간에 교육비 지출 규모를 비교하면 도시가 약 8% 정도인데 비하여 농촌은 10% 이상이 되고 있다.¹²⁾ 또한 고등교육 기회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도시 지역은 4년제 대학중심 진학인데 반하여 비도시 지역은 2년제 전문대학중심 진학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을 바로 잡기 위하여 비도시 지역의 고졸자들에게 사회적으로 부가된 불평등을 치유하는 것은 복지국가 실현에 도움을 준다. 특히 인문고 졸업자 중 85%가, 실업고 졸업자 중 45% 이상¹³⁾이 고등교육에 진학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학들은 스스로 이를 치유하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도입되고 있는 농·어촌 특별전형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입시정책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하기에는 미미한 수준이고, 또한 농업계열전공에 편중되어 개방되어 있어서 농·어촌 지역의 사회계층 이동에 별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분단 노동시장론자들은 인적지본론자들처럼 노동시장에

11) 인재지역활당제 추진위원회, 『인재지역활당제 왜 해야 하는가?』, 1998. 3.

12) 김부태, 『한국 학력사회론』, 내일을 여는 책, 1995, p.193.

13)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2001.

서 승진이나 임금 결정에 끼치는 학교교육의 영향력은 인정하나, 노동시장이 동질적이어서 차별적이지 않다는 인적자본론의 기본 전제에 대하여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분단구조와 차별성 때문에 사회평등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회균등의 도구로서의 교육정책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임금과 고용량을 결정하는 기능을 하는 노동시장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교육을 통한 사회계층 이동 효과가 긍정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사회 이동 효과가 공정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공정성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¹⁴⁾고 한다. 공평한 교육정책이 공정한 노동시장 정책과 함께 시행되어야만 사회의 불리한 집단의 교육을 통한 사회계층 이동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대학입시에서 지역할당제는 사회에서 고용상의 인재등용할당제가 병행되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자유주의자인 Mill¹⁵⁾이나 Friedman¹⁶⁾도 국가는 국방, 사법 및 치안, 공공사업과 같이 공정한 사회질서 확립과 공공사업 운영 및 예외적인 경우에만 개입하고 그밖에는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공공사업으로 사회간접자본과 교육을 들고 있다. 서민층의 자녀를 위한 교육을 국가의 의무로 보고,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인간의 소외나 인간성의 상실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정부개입이 필요한 부분을 의무적인 초등교육이나 약자의 보호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자유시장원리를 교육에 적용한다고 하

더라도 정의적인 차원의 정책적 배려에 대하여는 돌출구를 열어 놓고 있다.

서울대에 입학한 학생 부모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면 전문직이나 상류층이 대부분이고, 지역적으로는 대도시나 도시에 편중되어 있다고 한다. 현재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은 소수에 그치며 현재 입학정책으로는 기회균등을 실현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적극적인 평등 실현의 방법으로 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것이다.

IV. 지역할당의 부정적 논의

건국 이래 한국 사회에서는 '자유'라는 용어를 보편적으로 써 왔다. 자유주의를 표방하지 않은 정당이나 사회단체가 없으며, 스스로 자유주의자라고 말하지 않은 사람도 없을 정도이다. 자유주의¹⁷⁾의 인간관을 보면 인간은 보편적인 공적 존재로서 합리적이고 감성적인 능력을 공유하고, 개별적 존재로서 무한히 다양한 편차, 즉 개성을 존중한다. 그리고 사회관을 보면 개인 각자는 그 자체로 완전하지 않고 보완을 요하는데, 인간들은 일정한 차이를 보이면서 발달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함양할 수 없는 일부를 제공하기 때문에 상호의존관계를 중요시한다.

현재의 우리 사회는 자유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사회의 기반으로 정착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유주의의 기본 원칙으로 자유 보장의 원칙,

14) 오재립, "한국 교육의 정치경제학",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편, 『교육재정경제학백과사전』, 하우동설, 2001, p.1021.

15) John Stuart Mill,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with Some of their Applications to Social Philosophy*, Collected Works of John Stuart Mill, vol II & III, Introduction by V. W. Bladen, Textual Editor: J.M. Robson, University of Toronto Press, Roetledge & Cagan, 1965.

16) Milton Friedman, *Capitalism and Freedom*,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2; 최성표역, 『자본주의와 자유』, 형설출판사, 1990.

17) 김완진·송현호·이재율, 『공리주의·개혁주의·자유주의』,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p.145

자기 책임의 원칙, 경쟁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 투명성, 즉 정보 공유의 원칙을 들고 있다.¹⁸⁾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기본 방향으로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원칙으로만 존재할 뿐이지 규범화되거나 현실화되고 있지 못하다. 그 이유는 한국 사회를 칭칭 동여매고 있는 각종 연줄, 즉 지연, 학연, 혈연이 존재하고, 한국 사회에는 강건하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자유주의자의 집단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¹⁹⁾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오늘날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신자유주의에서는 유연한 노동력과 교육 경쟁력 강화, 수요자중심의 교육과 교육선택권 부여, 단위학교로의 자율성 확대와 기업적 경영원리 도입, 학교간 경쟁체제의 형성 등을 주장하고 있다.²⁰⁾ 이러한 주장들은 정보화 및 세계화 등으로 대표되는 현대 사회의 변화가 교육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교육체제는 교육체제와 교육의 체제와의 상호작용을 하는 개방사회체제이다. 교육체제는 교육 밖의 사회체제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회 발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를 토대로 교육의 모습도 예측할 수 있다. 21세기에는 세계화와 지역자치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러한 시대를 지역화된 세계화 즉, 세방화(Glocalization)시대라고 한다. 세계화는 국가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모든 체제의 경쟁이 세계 속에 개방되어지는 시대이어서 무한경쟁의 양태를 띠고 있다. 이미 이러한 현상은 WTO의 New Round로 현실화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예고하는 지역자치시대에서는 지역간, 집단간, 개인간 선의의 경쟁체제가 자연스럽게 예견된다. 즉, 자유주의를 실천하지 않으면 미래 사회 변화에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교육체제 중 수익자 부담원칙과 시장경제 원리를 가장 존중하는 대학교육 시장이야말로 자유시장 원리를 적용하는 시험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지역, 성, 사회계층에 따른 할당제를 적용하면 공정한 시장경쟁체제가 무너지는 것이다. 공식적인 제도를 통하여 영위되는 공교육의 경우에 있어서는 각종 규제와 인위적인 장벽이 완전경쟁시장의 형성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대학 중 사립의 경우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도록 경쟁체제를 지향하되, 국립의 경우는 사회가 요구하는 이데올로기를 달성하고 제도적인 불평등을 해소하는 보완체제로 발전을 하여야 할 것이다.

V. 결론

결론적으로 대학의 학생 선발 정책은 자유시장 원리를 주축으로 하여 경쟁의 원리를 기초로 하되, 사회정의적인 접근인 소외된 집단을 보상하는 보상의 원리를 병합한 정책이 현실적이며, 이러한 교육적 정책은 사회 혹은 노동 대책이 이를 지원해 줄 때 시너지 효과를 나타낸다.

학생 선발에 있어서 지역할당제의 도입은 기도입되고 있는 농·어촌 특별전형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지역할당제를 부각시키는 것은 농·어촌 특별전형이 차별화를 극복하는 수준이 아닌 미미한 수준이고, 농업계열전공에 편중하여 개방되어 있어 사회계층 이동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즉, 학생 선발 방법이 농·어촌 지역의 사회계층 이동에 별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따라서 학생 선발에서 지역할당

18) 이근식, 『자유주의 사회경제사상』, 서울: 한길사, 1999, pp. 771~773.

19) 상계서, p. 166.

20) 천보선·김학한, 『신자유주의와 한국교육의 진로』, 서울:한울, 1998.

제의 도입은 수능시험과 같은 능력 중심의 모집 정책에 지역 요인에 의하여 차등화되는 폐쇄된 세대 간 이동을 유연하게 하는 정책을 가미하고자 하는 정신이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본 정책의 함의 속에서 학생 선발 지역할당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기본적으로 정부의 학생 선발 정책은 대학의 설립 형태를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아직은 대학 자치라는 개념을 논하기에는 사회통념적으로 허용적 분위기는 아니나 국립대학과 사립대학간에는 차별화 하여야 한다. 국립은 국가가 공공적 목적으로 설립 운영하기 때문에 국가적 이념을 실천하는 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립은 시장경제의 원리를 적용하여 자본주의 철학을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입시정책모형을 국·사립간에 구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사립대학에는 국가의 입시정책 중 큰 골격만 제시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대신 국립대학은 국가가 정한 세부적인 준거에 따르도록 하되 사회정의적인 차원을 감안하는 도시영세민 자녀, 특수교육 대상자, 농·어촌 대상자 등을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보상적 차원의 입학 특혜 기회 부여는 역차별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사회가 허용하는 정도의 수준이어야 한다. 서울대 총장이 처음 제시한 인구 비례 방법은 자유주의 정신에 위배될 수 있는 소지가 강하고 헌법에 있는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는

다는 정신에도 위배될 수 있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인 균별로 1~2명을 선발하되 대규모 대학의 경우는 2명 정도, 소규모 대학의 경우는 1명 정도로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범국가 차원에서 입시정책과 더불어 지역할당에 기초한 노동시장 정책의 연계성을 공론화하여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지역할당제를 서울대에만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 국립대학에 확대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 대학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길 것인가. 모든 전공에 개방할 것인가, 아니면 특정 분야(농업계열)에만 한정할 것인가. 언제부터 실시할 것인가. 공정한 추천 기준은 무엇인가. 아울러 노동시장의 지역할당제 적용 범위와 양은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가 등 여러 가지 결정되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다. 이것은 대학의 자율성, 대학 설립 유형의 특성 존중, 사회계층 이동, 노동시장 정책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이고 앞으로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의 방향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중요 변수이기 때문이다. [4]

박종범

서울대 사범대학 교육학과와 서울대 교육대학원 교육행정학을 전공하였으며, 피츠버그대학 대학원에서 교육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회장, 한국교육정책학회 회장, 한국교육행정학회 학회지심사위원장, 문교부 대학교육심의회 위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가관리부장, 경북대학교 기획연구실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활동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학교경영론』, 『교육행정 및 학교경영』, 『효과적인 학교경영의 원리』 등이 있다.